

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선정

- 25.7월 이후 가정에서 분리된 위기아동에 안정적 보호 및 필수서비스 제공 -
- 2년간('25.7~'26년) 시범사업 통해 선도모델 마련, 전국확대 추진 검토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18일(수) ‘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’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
* 인천광역시 ^{가칭}아동 초기보호센터(수행기관: 인천보라매아동센터)

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,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(前)까지의 일시보호기간동안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.

주요내용은 ①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 및 조기 개입 서비스(심리상담, 검진 등) 제공,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(가정위탁 등) 자원 확충 책임 부여 ③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-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.

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*을 위한 전담인력(담당부서 공무원)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, ^{가칭}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추고,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7월 중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*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, 관내 아동보호자원 모니터링,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등

보건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“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며, “일시보호기간 광역 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를 통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

담당 부서	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아동보호자립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3430)
		담당자	사무관	신요한 (044-202-3441)

□ 사업개요

- **(목적)**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, 2년간 시범사업 통해 선도모델 마련
- **(참여주체)** 광역지자체(시도), 아동복지시설(기능전환), 연구진
 - **(광역지자체 책임성 강화)** 가정형 보호 확충 및 관내 아동보호 자원 총괄조정 신규 역할수행 모델 마련
 - **(시도 내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 지정)** 일시보호기간동안에도 안정적인 보호 및 심리상담 등 필수서비스 적시 제공
 - **(사업지원단)** 연구기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*
 - * 책임자 전주대 김광혁 교수, 연구원 윤찬영 교수, 아주대 최웅 교수 외 4명, 보조원 2명(총 9명)
- **(예산)** 1.7억 원('25.6.~12., 7개월)
 - **(연구용역)** 5천만원 / **(사업운영*)** 1억 2천만원
 - *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인건비, 종합심리검사비 등
- **(지원대상)** 7월 중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

□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후 아동보호체계

